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목 차>

1. 신협 임원 선거운동 시 공개된 장소의 범위
2.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형주		연락처	02-2100-2983
	과장	이진수		이 메 일	2081001@mail.go.kr

2022. 01. 25.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협 임원 선거운동 시 공개된 장소의 범위								
	2.규제조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7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2.11 ~ 2022.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								
	7.규제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상 임원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의7)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 다만, ①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②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은 제외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신협조합(870개) 및 신협중앙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신협조합(870개) 및 신협중앙회의 임원선거 후보자</td><td>2,000명 내외</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협조합(870개) 및 신협중앙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2,000명 내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협조합(870개) 및 신협중앙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2,000명 내외								
9.규제목표	신협 임원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공정한 선거운동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을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제4조의7, 제5조, ----- ----- ----- ----- ----- -----.
<신 설>	제4조의7(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현 행	개 정 안
	<p><u>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u></p> <p><u>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u></p> <p><u>2.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탁법(§27조의2②5호*)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

*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신탁법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신탁 임원에 대한 선거 운동 방법 중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신탁 임원선거 후보자	신탁중앙회를 통해 의견청취('21년 하반기)	의견없음	

3. 규제목표

- 공개된 장소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정함으로서, 선거과열 방지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활동이 가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개장소와 동일하게 신탁에 적용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업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개장소와 동일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탁중앙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준수가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신탁법 상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신탁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정하는 것임

2. 향후 평가계획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이후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선거운동방법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하여 선거운동 활동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2.규제조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2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2.11 ~ 2022.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을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금융업권 조합(2,220개) 및 상호금융중앙회(4개)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상호금융조합</td><td>2,220개</td></tr><tr><td>피규제자</td><td>상호금융 중앙회</td><td>4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조합	2,220개	피규제자	상호금융 중앙회	4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조합	2,220개											
피규제자	상호금융 중앙회	4개											
9.규제목표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도입 이후 세부사항을 정함에 따라 조합원 등의 권익 증대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10	<p>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영 제18조 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p> <p>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 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 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p> <p>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 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경우</p> <p>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 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 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 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 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 신협법 개정안 공포('22.1.4) 후 6개월 이후 시행('22.7.5)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자료 제출 요구권,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
· 관리의 근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신협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러한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규정할 필요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이미 법률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시행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도 동일한 내용을 감독규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이메일로 개정안에 의견 제시	의견없음	
상호금융중앙회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의견수렴예정	

3. 규제목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은행, 보험, 저축은행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감독규정 조문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비교할 때,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업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리인하 요구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만큼, 상호금융 조합 및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2.1.4)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금리인하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향후 평가계획

: 감독규정 개정 이후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 가능